

“중앙재난본부 가동에 골든타임 53분 날렸다”

세월호 국조특위, 첫 기관보고서 정부 무능 질타

“세월호 항적 파악 못한 軍 유사시 어떻게 믿나”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지난 30일 전체회의에서는 부실한 초동 대응 등 정부의 무능함을 질타하는 여야 위원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위는 이날 안전행정부·국방부·전남도·진도군을 대상으로 첫 기관보고를 받고, 안행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 제1 컨트론타워로서 역할을 못했다는 점을 집중 추궁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사고 직후 10개가 넘는 대책본부가 만들어졌는데 정보 공유 및 조율이 전혀 되지 않았다”면서 “특히 중앙재난본부 가동이 무려 53분이 나 걸렸으며, 안행부 장관은 사고보고를

받고 ‘대형참사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신의진 의원은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세월호는 국제조난통신망인 16번 채널로 해경에 구난요청을 했지만 해경이 아무 답신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대수 의원은 “실질적인 구조 기능이 없는 링스헬기가 출동했다. 희생자들은 헬기를 보고 희망을 가졌을 텐데, 차라리 헬기가 출동하지 않았더라면 더 적극적으로 구조에 나섰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사고 당일 해군의 헬리콥터가 10시 1분 현장에 도착했지만 구조장비와 인력

없이 정비사만 태우고 가는 바람에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다”며 “특히 해경 구조대가 있던 전용부두와 거리는 고작 1km 가량이 불과했는데 태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해군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새정치연합 민홍철 의원은 “세월호는 6000톤 이상의 선박으로 국군의 레이더망에 실시간으로 항적이 감지된다”며 “참사 당일 국방부가 세월호의 항적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유사시에는 적군의 동태도 파악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현 의원은 “군은 가용병력과 장비를 수색작전에 총동원한 것처럼 설명했지만, 막상 참사 당일 투입된 군의 해난 구조 잠수 장비는 현장에 투입된 잠수요원 50여명을 위한 스킨스쿠버 장비 40세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더군다나 공기통은 사람 수보다 적은 26개만 가져가

수중무인탐사기, 잠수기 세트, 심해잠수장치 등은 활용해보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행부에 대한 비판도 빠지지 않았다.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안행부는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의 잠적이 장기화되자 임시반상회를 열고 수배 전단을 배포했다”며 “대통령의 발언을 의식하고 나온 전형적인 전사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김현 의원은 “안행부는 참사 발생 5일 전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여객선 안전대책 점검을 지시했으면서도 사고를 막지 못했다”며 “정부 대응의 무성의함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심재철 특위 위원장이 약속했던 기관보고를 진도 현장에서 받지는 부분은 이날 오후까지 여당 내 일부 위원의 반대로 최종 결론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30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가족 대표단이 국방부와 안행부, 전라남도, 진도군의 기관보고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재난지역 특별교부금 엉뚱한 데 사용”

신의진 의원, 62억 하천정비·도시환경 개선 등 배정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도와 진도군, 경기도 안산시에 지원된 특별교부세의 일부가 사고와 상관없는 사업에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지난 30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월호 참사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

남도·진도군·안산시 등에 특별교부세 153억5000만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지급된 62억원 중 대부분이 세월호 사고 복구와 직결됐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지원받은 특교세 30억원을 ‘벼 옆에 상습피해 예방’과 ‘진도 의신천

개선 복구’ 사업에 쓰기로 했고, 진도군은 17억원 가운데 7억원을 ‘밀집상가 도시경관 정비’에 배정했다. 또한, 안산시는 특교세 15억원 중 5억원은 ‘근로자 운동장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에, 5억원은 ‘대부동 복지관 리모델링’에, 남은 5억 원은 ‘상록수역 주변 보행환경 개선’에 사용하기로 했다. 신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지자체들이 예비비까지 동원하는 상황에서 세월호 사

고와 무관한 사업에 예산이 지원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특히 안산시는 예비비 사용액이 44억원에 달해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세월호 사고 후 전남도가 진도군에 교부한 ‘시책추진보전금’은 15억1000만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5억원이 ‘진도 공설 운동장 분부석 증축’에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 없는 목적에 배정된 특별교부금은 다시 회수해야 한다”며 “지자체에서 다시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이완구 “김명수, 논문표절 문제엔 통과 못시켜”

〈교육부장관 후보자〉

칼럼 대필 증언도 나와

제2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제자에게 언론사 칼럼을 대필시키고 수업도 맡겼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 후보자를 지도교수로 석사학위 논문을 받았던 현직 초등학교 교사인 이희진씨는 지난 30일 모 주간지에 기고문을 통해 “표절 의혹이 제기되는 논문 중 상당수는 제가 같이 수업을 들었거나 연구실에서 봤던 사람들의 논문”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논문뿐 아니라 다른 대학이나 기관에서 특강에 필요한 원고, 발표 프레젠테이션 자료 역시 학생들이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 일간지에 오랫동안 쓴 기명 칼럼과 관련, “교수님이 말씀해주시는

방향과 논지로 학생이 글을 쓰고 교수님께서 그 글을 확인하고 조금 수정해 넘겼다”며 제자 대필을 증언했다.

이와 함께 이씨는 학기의 3분의 1가량을 “저를 비롯한 다른 학생들이 돌아가며 한주씩 수업을 했다”며 김 후보자의 수업 강의를 제자들이 대신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적 눈으로 볼 때 논문 표절이나 연구비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다면 통과를 못 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속단은 금물인 만큼 청문회를 열어 객관적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朴대통령 “공직후보자 상시 발굴 인재풀 만들것”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0일 “유능한 공직후보자를 상시 발굴해 인재풀을 만들고 이들에 대한 평가와 검증자료를 평소 미리 관리해 필요한 자리에 꼭 필요한 인재풀을 찾아 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미 발표한 것처럼 앞으로는 인사수석실을 신설해 인사시스템 전반을 개선해나갈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인사 실패가 단순히 청와대의 의지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 털어낸 먼지가 안 나도록 일상에 변화가 필요하고

특히 국민을 대신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울로(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분을 찾아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토로했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총리 후보자의 국정시행 능력이나 종합적인 자질보다는 신상털기식, 여론재판식 여론이 반복돼 많은 분들이 고사를 하거나 가족들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청문회 가기도 전에 개인적 비판이나 가족들 문제가 거론되는 데는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4대강 사업 부채 결국 세금 투입?

국토부, 내년 예산 반영 요구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 강 사업을 하면서 진 8조원 규모의 부채를 갚기 위해 세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0일 “수공의 부채 8조원을 상환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안에 800억원을 반영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며 “다만 아직 정부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채 원금 상환을 위한 800억원 외에 부채 이자를 갚기 위한 3710억원도 기재부에 추가로 요청했다.

정부는 2009년 9월 수공이 4대 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도록 결정하면서 이자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원금은 개발수익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다만 부족분이 있을 경우 사업 종료 시점에서

수공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해 재정 지원의 규모·시기·방법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차 비용으로 2010년 700억원, 2011년 2417억원, 2012년 2885억원, 2013년 3178억원, 2014년 3200억원 등 지금까지 모두 1조2380억원을 지원했다.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9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수공 부채의 원금 상환에 재정을 투입할지, 한다면 얼마나 할지 등을 결정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수공의 4대 강 사업 참여를 결정할 당시 부채 원금은 천수사업을 통한 투자수익으로 상환한다는 방침이었다. 강 유역 주변에서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을 벌여 그 수익으로 빚을 갚는다는 것이었다. /연합뉴스

www.gaok.or.kr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Global Innovation 세계속의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GYEONGSANGDO, 제주특별자치도

민선 6기의 출범을 축하합니다

지방분권으로 시작하는 대한민국의 변화!

변화하는 대한민국!
지방분권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열쇠입니다.
전국 17개 시·도가 함께 열어가겠습니다.